

# “국가예산 10조 성과 넘어 다음 단계로”

김관영 도지사, “더 넓은 재정 영역·새로운 기회 선점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재정보호 흐름 지속 주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8일 합동간부회의에서 “이번 국가예산 10조 원 확보는 전북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린 중대한 결실”이라면서도, “성과를 발판 삼아 더 넓은 재정 영역과 새로운 기회 선점을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진행되고 있는 중앙부처 업무보고에 대해 언급하면서 “부처 방향과 코드를 맞춰 2027년 신규사업 발굴로 연결하고, 올해 미반영 사업은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논리를 보강해 추가 확보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민선8기 켜켜이 쌓아온 협력 기반은 유지하되,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새로운 접근과 혁신적 구상으로 더 큰 전북특별자치도를 향한 기회를 열어가라”고 지시했다.

2026년을 앞두고 준비 중인 도민께선보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새해 도민이 처음 마주하는 도정 이정표인 만큼 완성도 높게 계획 수립을 이어가라”며 “실국별 비전을 선포했던 3개년 계획의 이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그간의 성과와 반성, 향후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 도민이 전북특별자치도 변화의 흐름을 한눈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예결위 계수조정을 앞둔 2026년 예산안에 관해서는 “상임위에서 지적 사항은 내년 사업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8일 합동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완하라”면서도 “도정 핵심과제와 직결된 사업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충실한 설득으로 반드시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새 정부 정책에 발맞춰 전북 혁신 의지도 다졌다.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는 지방과 수도권 간 산업 격차를 줄

이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 축을 만드는 국가적 기회”라며 “우리 도와 직·간접적으로 연계 가능한 과제를 선별하고, 관련 전문가 및 도내 기업과 접촉하는 등 전략적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간부회의에 참석한 출연기관

장들에게는 “출연기관의 주요업무계획은 도정 기조와 어긋남 없이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며 “소관 부서와 긴밀하게 소통해 정책 목적과 추진 방향을 일관되게 맞추고, 병행이 아닌 동행의 체계를 정착시키라”고 주문했다.

/이만호 기자

## “피지컬 AI 전진기지 구축 등, 전북 발전에 중요”

인터뷰 - 유창희 전 전북자치도 정무수석

“전북특별자치도 지정, 가장 보람된 일  
하계올림픽 유치 후보 선정도 큰 성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2년간 정무수석을 역임한 유창희 전 수석이 지난 달 21일 조용히 임기를 마쳤다.

퇴임 후 바로 인터뷰 요청을 했으나 시간이 맞지 않아 차일피일 미루어지다가 마침 지인의 결혼식장에서 주례를 서고 있는 유 전 정무수석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

“만 2년 근무했습니다. 돌아보면 매일 즐겁으로, 차로, 마음으로 현장을 향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느냐는 질문에 그는 “정확히 셀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38권의 수첩에 적힌 깨알 같은 민원 사항 하나하나가 얼마나 치열하게 정무수석으로 열심히 일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지인들은 그가 2년여간 770여 만보를 걸었다고도 전했다.

“지역에 자신을 찾는 목소리가 있다면 어디든 떠나하지 않았습니다. 밥이든 새벽이든, 찾아오는 분들이 있다면 가능한 한 모두 만나려 했습

니다. 제가 가진 역할의 전부는 ‘듣는 것’이었습니다.”

유 전 수석은 재임 중 가장 아쉬운 점으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과 전주·완주 통합을 꼽았다. “두 가지 모두 전북의 미래 구조를 바꿀 큰 일들이었습니다. 뜻을 팔까 지 실천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도청 현장에서 오랜 기간 민원을 제기해 온 자임 추모공원 문제 관련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한 것도 그에게는 큰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고 전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전남에 대규모 국책사업이 집중되는 상황에 대해 유 전 수석은 단순한 수치 비교가 아닌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은 전남만의 발전 전략을 제시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전북도 전북만의 완성도 있는 미래 전략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가 전북 발전을 위해 중요하게 꼽은 것은 피지컬 AI 전진기지 구축과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기반 첨단 산업단지 유치다.

“지역 균형발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어젠다입니다. 전북이 스스로 길을 만들면 중앙정부는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새만금 공항 1심 패소 판결에 대해서도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전북은 하늘길 없이 미래로 갈 수 없습니다. 기업들이 세계로 나가려면 항공 인프라는 필수입니다. 2심에서는 반드시 제대로 준비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믿습니다.”

가장 보람된 일로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정을 첫 번째로 꼽았다. “전북

이 특별한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미래를 새로 쓴다는 의미입니다. 신산업의 테스트 베드가 되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도시 선정도 큰 성과였다.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와 경쟁해 얻은 결과입니다. 전북이 한 단계 도약할 기회라고 믿습니다.”

인터뷰 마지막, 유 전 수석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2년 동안 저를 믿고 응원에 주신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현장에서 함께해 준 언론인 여러분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님께서 민선 8기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는 정무수석직을 떠나면서도 전북을 떠나지 않았다. 38권의 수첩이 증명하듯, 그의 눈은 여전히 전북의 희망찬 미래를 향하고 있었다.

유창희 전 정무수석이 지난 2년간 작성한 38권의 수첩은 전북 도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보낸 시간의 증거이자, 현장 중심 행정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

/이만호 기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와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송전망 갈등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송전탑 갈등, 에너지 구조 개혁 계기 삼아야”

민주 안호영 의원, 송전망 갈등 해법 모색 토론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 등 해법 제시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이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와 8일, 송전망 갈등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수요 급증 속에서 전북이 ‘송전탑 피해 지역’이 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자리였다.

안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북은 재생 에너지의 생산지이지만, 정작 성장 기회에서는 소외되고 송전 부담만 떠안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보상 중심의 접근보다 중요한 것은 전력 체계를 전환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은 송전망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주민 수용성과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차관은 토론회 종료까지 자리를 지키며 질의응답에 적극 참여해 이재명 정부가 이 문제를 핵심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있

음을 보여주었다.

발제자·토론자들은 장거리 송전 중심의 기존 체계가 갈등을 키우고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2·3단계 사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받았다.

이번 토론회는 12월 중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전북 타운홀 미팅을 앞두고 개최돼 더욱 주목을 받았다. 대통령이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에서 송전망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전북이 재생에너지를 성장의 자원으로 바꾸는 구조적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함께 새로운 전력체계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마치고 이날 오후, 안호영 의원과 일부 발제자·토론자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타운홀 미팅에서 다룬 송전망 관련 의제를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호 기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하도급사까지 확대

민주 안호영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장, 완주·진안·무주)은 8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의 계상 의무를 하도급사까지 확대하고, 노사가 합의한 항목에 한해 산안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안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계상·사용해야 하는 비용이다. 그러나 산안비 사용 의무가 공사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에만 부여되어, 하도급사의 경우 산안비가 부족하거나 미계상되는 사례가 잦았다. 개정안은 산안비 사용 의무를 하도급사까지로 확대하여 영세 하청현장에서 산재 예방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산안비 사용 항목을 노사 합의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안비 계상 기준과 사용 항목이 지나치게 한정적이고 불명확해

사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현행 규칙상 △근로자 건강관리실 △안전 표지판 설치와 같은 안전 관련 항목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산안비로 집행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지금껏 불규칙하게 개정되어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도 노동부가 정기적으로 심의·개정하도록 했다. 매년 노동부가 산안비 사용 실태를 조사한 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한편, 안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건설업계의 산안비 전용 실태를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의원실 확인 결과, 최근 5년 동안 산안비 집행 규정을 위반한 2,543개 사업장 가운데 701곳(27.5%)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산안비가 정상적으로 집행되느냐가 곧 현장의 산재 예방과 안전 수준에 직결된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안수용 이사장, ‘안수용의 정읍일기’ 출판기념회 성황

정읍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사단법인 들레 안수용 이사장이 지난 7일 정읍 연지아트홀에서 ‘안수용의 井(정읍)일기’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읍의 꿈, 문화의 힘’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윤준병 정읍·고창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기관·단체 관계자, 문화예술인,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출판기념회는 식전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내빈 축하, 북토크, 시민 질의



응답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구성되어, 안 이사장이 그동안 준비해 온 정읍의 미래전략과 문화 비전을 시민들과 폭넓게 공유하는 장이 되었다.

/정읍=김대환 기자

## 도의회 예결특위, 교육청 예산 심사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대상 정책질의 이어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 전주11)는 8일 오후, 전북자치도교육청의 ‘2026년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정책질의의 이어갔다.

김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6)은 도내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은 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관련 예산이 2026년 감액 편성된 점을 질의하며, 환기시설 미비로 폐암 등 직업성 질환 우려가 있는 만큼 감액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학생과 교직원 건강과 안전을 위해 조속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이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4)은

학령인구 감소는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인 만큼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향후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할 경우 통학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은 최근 도내 청소년 대상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약물 처방이 급증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집중력 저하나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불안감을 겪는 학생들에 대해 약물치료 중심이 아닌 심리상담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ADHD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통합적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만호 기자

## 장연국 도의원, ‘전북자치도 인물대상’ 수상

광역의정활동 부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지난 5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2025 전북특별자치도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정활동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전북특별자치도 인물대상은 정치·경제·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도민이 신뢰하는 대표적 인 지역 공헌 시상식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장연국 의원은 그동안 △지역발전과 도민 복지 향상, △균형발전과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 등 ‘의정 발전에 뚜렷한 성과를 이루고, 지방자치의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인물대상 조직위원회는 “장연국 의원은 도정 전반을 아우르는 균형 있는 정책감사와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지역 의정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며 “광역의정활동의 모범 사례를 보여준 수상자”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만호 기자